

‘우문현답’의 자세로 산업안전·고용노동 분야 현안 해결 산재 감소는 안전보건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흘린 소중한 땀의 결실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

취재 임동희 기자 ldhfree@safety.or.kr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이 취임 1년을 맞았다. 이 장관의 취임 후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산업재해자의 감소, 산재율 감소 등의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산재감소를 위한 각계의 노력을 한데 모아나갔던 것이 이렇게 큰 성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외에도 이 장관은 근로 시간 줄이기 등 다양한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점을 고치려 많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장관과 우리나라 산업안전 분야의 산적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계획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최근 산업재해율이 0.6%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노·사의 노력과 더불어 안전보건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흘린 소중한 땀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2010년 12월부터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안심일터 추진본부’를 구성·운영하여 범사회적으로 재해예방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안전보건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도 다각도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노·사, 안전보건 관계자의 힘이 더해져서 산업재해가 최근 감소세에 접어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Q. 아직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 수준은 OECD 국가 중 여전히 최상위로 평가됩니다. 선진국 수준의 안전문화를 이루는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의 역사가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짧아 노·사의 안전의식이 낮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후 척박한 환경에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짧은 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룩한 국가입니다. 이런 국민적 역량이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도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 특히 사업주들로 하여금 '안전보건기준을 지키는 것이 지키지 않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인식을 하루빨리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우리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노·사의 높은 안전의식을 기반으로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지도·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적발 확률과 처벌 강도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에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개선 의지가 있지만, 재정·기술능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산업안전보건을 선진화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Q. 앞으로 법 개정을 준비하고 계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조·건설업으로 한정되어 있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도급업체로 하여금 수급업체에 유해·위험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최근 설계단계에서의 안전성 검토 미흡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0년 7월 부산 해운대 초고층아파트 RCS품 추락사고가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아 세 사람이 사망한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완료 전에 발주자로 하여금 전문기술자의 안전성 검토를 받도록 하면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Q. 건설업 재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3월 기준으로 지난해 건설업 사고재해자수는 3,938명이었는데 올해는 4,556명으로 15.6% 정도 증가했습니다. 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공사 등 중소규모 건설공사가 크게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앞으로 다세대 등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

하고, 안전관리 불량 현장과 관련해선 수시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공사규모를 불문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를 통해 20억 원 미만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순찰을 강화하고, 3억 미만 현장에 대해서는 민간전문지도기관을 활용하여 재해예방 기술 지도를 시행해나갈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안전점검의 날'에 보호구 착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나가면서 산업현장 전반에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Q.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은 산업안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고용부의 계획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근로는 단기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누적되면 큰 피해를 줍니다. 하루에 11시간 이상 일할 경우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정상보다 2.94배 높다는 연구결과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노동의 총량을 늘리는 동시에 근로자 개개인의 노동 질을 높이기 위한 '장시간 근로'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근로자, 기업, 국민 모두에게 유익한 일석오조(一石五鳥) 이상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장시간 근로를 조장할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노·사, 국민 등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장시간 근로 개선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적극 홍보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고용부는 이 '장시간 근로개선'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문화를 산업현장 곳곳에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Q. 전국 산업현장의 경영진과 근로자 분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영진의 의지와 실천이 산업안전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영자는 안전보건문제를 생산 활동 중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적 요소로 삼아야 합니다. 안전관리가 부실한 기업은 전반적인 경영 관리도 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역시 재해예방활동에 대해 주인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족과 나아가 기업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